

계파 통합·혁신 '강한 민주당' 시험대 올랐다

‘친명 그룹’ 완승으로 끝난 민주 전대 경선 과정 친명·비명 갈등 고조 진영 간 화해 가장 시급한 숙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도 시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신임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친명 그룹’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당내 화합과 단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계파간 통합을 통해 진보세력의 결집도 함께 견인해야 향후 대권 도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 친명 그룹은 비주류 진영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이어갔고,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도 ‘친명 주자와 비명 후보 갈리지기’ 현상이 두드러져 ‘진영 간 화해’는 가장 시급한 숙제가 될 전망이다.

2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친명·비명 진영 간의 갈등 현상이 뚜렷했다.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시작부터 독주를 하면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경선을 이끌었고,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졌다.

친명 진영은 누적득표를 후순위로 박찬대·서영교·장경태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선출직 최고위원직도 친명계가 쓸어 담는 경선 전략을 폈다.

반면, 비명 진영에서는 윤영찬 의원 등이 송갑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친명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 호남 경선에서도 친명·비명간 대립은 극에 달했다. 일부 친명 진영 국회의원은 친명 최고위원 후보를 SNS 등을 통해 공개 지지했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친명 주자에 대한 줄서기가 이어졌다. 일부 비명 최고위원 주자에 대한 비난을 노골적으로 담은 글과 사진 등이 지역 정치권 SNS에 광범위하

게 퍼져나갔고, 송갑석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일부 정치인은 ‘수박’이라는 낙인과 함께 대규모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이같은 친명·비명간 갈등은 전당대회 기간이었던 지난 21일 마무리된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연출했다. 일부 친명 진영에서 특정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가 과거 이재명 신임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전력을 문제삼아 노골적인 낙선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과거 전당대회도 주류와 비주류 간 경쟁이 잦았지만 이번에는 특정 지지층이 전당대회 전만을 흔들면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만큼 당 내부의 상처가 크다”면서 “지도부를 친명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향후 총선에도 막강한 공천권을 휘둘러 가능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로서는 물론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앞서 당헌 80조 개정 과정에 당내에서도 ‘이재명 방탄’ 지적도 많았던 만큼,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슬기롭게 풀어야 당내 입지도 당달아 탄탄해 질 전망이다.

친명 진영이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호남 정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에 지지를 호소했고, 이에 상당수 국회의원이 친명에 합류했지만 여전히 비명 노선을 걷는 국회의원이 많아 향후 ‘당 지도부와 호남 비명’과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친윤과 비윤으로 급속하게 분열되고 있는 만큼, 친명과 호남 내 비명간 화합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민주당마저 친명·비명 갈등을 이어간다면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진 전 국정원장은 이날 SNS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무엇보다 당의 단결과 진보세력의 단합을 견인해야 하며, 당직 인선에 능력과 당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개혁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박찬대, 고민정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 (국회사진기자단)

최고위원 5명 중 4명 ‘친명’... 호남 대표 송갑석 아쉬운 낙마

정청래·고민정·박찬대 1·2·3위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유일할 비수도권 출신으로 호남을 대표했던 송갑석(서구갑) 의원이 낙선했다. 특히 이번 경선에서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흐름 속에서 5개 최고위원직도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4명이 쓸어 담으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친정 체제’가 됐다.

28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정청래 의원이 최종 득표를 25.20%로 1위를 차지했다. 고민정 의원이 19.33%로 2위였다. 이어 박찬대 의원이 14.20%, 서영교 의원이 14.19%, 장경태 의원이 12.39%로 뒤를 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10.81%로 6위, 고영인 의원은 3.88%로 7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이들 최고위원 중 고민정 의원을 제외한 4명이 친명이고, 최고위원 수석도 다득표자인 정청래 후보가 차지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는 친명이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국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반면, ‘개팔’로 대변되는 친명의 적극적인 집결로 비명 인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연직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5명, 당 대표가 지명하는 2명 등 총 9명이다. 이로써 이재명계는 고민정 신임 최고위원을 제외한 대부분 최고위원 자리를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을 배려하겠다는 뜻을 밝

혔지만 사실상 자신의 호남 계파로 최고위원을 채울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 지도부 내에서 입지도 좁아 사실상 ‘명예’가 강하고 ‘실권’이 약해 호남 지명직 최고위원 선정은 ‘호남 달리기’에 그칠 우려도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한병도·서삼석 의원에 이어 송갑석 의원마저 최고위원 도전에 실패하면서 민주당 내 ‘호남 정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명계가 당권을 쥐면서 호남의 정치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당장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호남 내 친명과 비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이는 곧 향후 총선 공천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정부 1기 내각·참모진 52명 평균재산 43억

윤 대통령 76억4천만원 신고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총 76억39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월 중순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77억 4534만보다 1억여 원 줄어든 금액이다.

정무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 대부분은 예금이었다. 윤 대통령 명의로 된 예금이 5억2595만3000원, 김 여사 명의로 된 예금이 49억9993만4000원이었다.

윤 대통령 예금 중 626만6000원은 보험이었고, 나머지는 은행 저축 예금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으며,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에 총 18억 원으로 잡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평균 4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신규 임용된 대통령실 참모진 13명, 국무총리 및 장·차관급 39명 등 52명의 재산을 집계한 결과다. 6월 이후 임명된 인사들의 재산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진은 김대기 비서실장(48억1000만원)을 비롯해 총 13명으로, 평균 34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120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내각에서는 총리와 장·차관급 39명이 평균 45억 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종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9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한덕수 총리는 85억원을 신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절충안 당헌 유지...기소시 당무위 구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계파 간 논쟁을 불러일으킨 당헌 개정안이 지난 26일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시 당직·당무위 구제’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80조)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의 결정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견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인데 의결 주제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수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 대표가 당무위 의장인 만큼 전당대회에서 대세를 굳힌 이재명 후보를 위한 ‘셀프 구제’의 길은 우회로를 통해 여전히 열려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향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향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	-----------------------------	---